



메가프로젝트
2~3면, 12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이란 전쟁 패배를 뒤집으려는
트럼프의 책략 4면

장윤기 사건과 검찰 보완수사권
5~8면

십대의 극우화?
9면

제국주의의
가속되는 위기 10~11면

장윤기 사건은 검찰 부패를 보여 준다

그러나 검찰에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관련 기사 5~8면

고전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론으로 본 메가프로젝트

장호중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한 세대 전과 완전히 판판이 돼 있음을 보여 준다. 세계화가 순항하던 시절, 세계 자본주의를 호령하던 미국과 주요 열강은 국가가 시장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현실이 무엇이었던 간에) 외쳤다.

이제는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이재명의 메가프로젝트에서 (국가를 대표해서) 정부는 한국의 최대 반도체 기업 성장을 위해 돈과 땅과 전기와 물을 대겠다고 나섰다. 이쯤 되면 외국 기업들로부터 불공정 경쟁이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한데 그런 조짐도 없다. 뒤에서 보겠지만, 지금 세계 곳곳에서 국가와 대기업이 한 몸이 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술 더 뜨고 있다.

110년 전 제1차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5년 러시아 혁명가 니콜라이 부하린이 《제국주의와 세계경제》에서, 그리고 이듬해 레닌이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레닌은 자본주의가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자유 경쟁이 낳은 집적과 독점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자, 거대 자본들은 국가와 융합해 세계 자체를 두고 다투는 경쟁으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세계 분할은 “자본에 비례해”, “힘에 비례해” 이뤄진다고 레닌은 썼다.

부하린도 자본주의의 ‘최신’ 현상을 파고들었다. 은행과 산업이 결합한 거대 독점체들이 국가와 갈수록 긴밀하게 얽히더니, 마침내 나라 경제 전체가 하나의 기업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부하린은 이렇게 썼다.

“국민경제”는 금융 집단과 국가가 형성한 하나의 거대하게 결합된 트러스트로 전화된다. 우리는 이 조직을 국가자본주의 트러스트라고 부른다.”(니콜라이 부하린, 《제국주의와 세계경제》, 책갈피)

이런 국가자본주의 트러스트 간의 경쟁은 세계시장에서 이전 어느 시대에도 없던 규모로 다시 떠오른다. 세계경제가 긴밀히 통합될수록 국가들

사이의 경쟁은 오히려 격화한다는 역설이 레닌과 부하린이 남긴 제국주의론의 핵심이다.

국가자본주의 트러스트

산업통상부는 보도자료에서 반도체 전략을 속도전·거점전·선도전이라고 명시했다. “국가[의] 전 구성원이 단결하는 총력지원체계”라고 강조했다. 전력·융수 대책에는 ‘전기국가’라는 신조어도 등장한다. 전쟁과 총동원의 어휘가 문서를 가득 채우고 있다.

재원은 반도체 특별회계, 국민성장펀드, 초저리 장기임대 산업단지로 마련한다. 기구로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국가가 직접 시장 확보·조성에 나선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앞장서 교육, 국방, 재난대응 등을 위한 로봇을 선제 구매하여 초기 시장을 창출”한다.

전기와 물은 한국전력과 수자원공사가 공급하고, 부지는 인허가 단축과 강제수용 절차로 보장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6일 점검회의에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토지의 협의 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이제 부하린이 1915년에 작성한 목록과 비교해 보자.

“국가 발주가 ‘국민적’ 기업에게 제공된다. 위험에 처했지만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는 ‘유용’한 기업에게는 소득이 보장된다. 갖가지 방법으로 ‘외국인’의 활동을 방해한다.”(위의 책)

보조금, 군수 주문, 신용 정책, 자국 기업 전용 발주, 위험 사업에 대한 수익 보장 등 항목 하나하나가 110년 전과 판박이다. 로봇 선제 구매는 자국 기업 전용 발주의 현대적 판본이며, 특별회계와 성장펀드는 국가가 돈을 끌어모아 보조금을 대는 셈이다.

의사결정 구조도 마찬가지다. 메가특구특별법의 골자는 국회 심의에 앞서 당정협의에서 조율되고, 여당은 ‘메가프로젝트 지원 TF’를 꾸려 법안 통과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힘은 ‘관치’ 운운하며 트집을 잡았지만, 입지(호남) 등을 문제삼은 것일뿐 메가프로젝



정부는 세계 2~3위 반도체 기업을 위해 “국가의 전 구성원이 단결하는 총력지원체계”를 다짐했다

트 자체에 반대하지 않았다. 부하린은 이런 구도 역시 이미 묘사했다. “오늘날 의회는 대체로 장식품에 불과하다. 그것은 기업이 조직이 미리 준비한 결정들을 확인하고, 통합된 부르주아지 전체의 집단적 의지를 형식적으로 비준할 뿐이다.”(위의 책)

국가와 시장 — 짧은 역사

레닌과 부하린이 포착한 경향은 그들의 사후에 만개했다. 1929년 대공황이 닥치자 영국과 미국은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자국 경제에 보호장벽을 쳤다. 그리고 제2차세계대전 참전국들은 전시에 경제 전체를 국가가 직접 통제했다.(크리스 하먼, 《크리스 하먼의 새로운 제국주의론》, 책갈피, 46~50쪽)

제2차세계대전 후에도 국가자본주의는 한동안 우세했다. 서방의 기간산업 국유화와 복지국가, 소련과 동유럽·중국의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남반구 신생 독립국들의 국가 주도 발전 전략 (“발전주의 국가”)에 이르기까지 20세기 중반기 동안 세계 자본주의의 지배적 형태는 모종의 국가자본주의였다. 1970년대 중반 이윤율 위기가 닥친 후에야 시장 근본주의자들이 변방에서 주

류로 부상했고, 치열한 쟁투 끝에 우리가 아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렸다.

그 시대에 국가가 정말로 물러난 것은 아니었다. 신자유주의 종주국 미국의 정부지출은 신자유주의 원년이라 할 1979년에 국내총생산의 33.6퍼센트였는데, 이후 오늘날까지 한 번도 34퍼센트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 코로나19 대응이 정점에 달한 2020년에는 47.3퍼센트까지 치솟았다.(에이드리언 버드,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189호) 파산한 기업들을 구제하느라 2008~2009년에도 각각 38퍼센트, 45퍼센트를 기록했다.

다른 선진국 경제도 대체로 비슷한 추세였다. 국가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역할을 조정했다. 자본 규제와 사양산업 지원에서는 물러났지만, 노조를 공격하고 노동자에게 시장 규율을 강제하는 역할은 오히려 강화했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후퇴한 것은 국가 전체가 아니라 국가의 ‘왼손’ — 과거 사회적 투쟁의 흔적인 복지 부서들 — 이고, 재무 관료와 은행이라는 ‘오른손’은 여전히 강력하다고 꼬집은 바 있다. 요컨대 신자유주의 질서의 실체는 국가의 퇴장이 아니라 부분적이고 선택적인 후퇴, 정확히는 재편이었다.

전환점은 2007~2009년 미국발 세계



제국주의 열강을 쫓아가는 야망은 국내에서도 파괴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올해 3월 용인 산단·송전선로 건설 반대 시위

경제 위기였다. 금융 시장이 붕괴하자 각국 정부가 개입해 은행을 국유화하고 재정을 투입했다. 그리고 “부자들의 사회주의”라고 자조적으로 불렀다. 자유시장의 본산이라는 미국에서 그랬다. 2012년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국가자본주의의 부상’이 신흥국들의 새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2020년 시작된 팬데믹 위기는 이 흐름을 가속했다.

가장 앞서 나간 국가는 중국이었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성장은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자유화·시장 개방과 나란히 갔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이후 방향을 약간 틀었다. 2015년 국가안전법은 모든 기업 활동을 국가안보의 일부로 규정했다. 기업마다 경영진에 공산당 세포가 포함돼 전략적 결정에 관여했으며, 국유은행 대출은 국유기업으로 쏠렸다. 1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대기금이 첨단 산업을 뒷받침했다. (“반도체 굴기”)

미국 트럼프 1기 정부는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을 상대로 기술 전쟁과 수출 통제를 시작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를 이어받아 2,8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과학법으로 중국과의 기술패권전쟁을 이어갔다. 2025년 초 중

국 딥시크의 AI 모델 발표가 미국에서 ‘스푸트니크 순간’(경쟁자에게 허를 찔린 충격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자, 트럼프 2기 정부는 국가 개입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였다.

인텔 지분 10퍼센트를 취득해 사실상 최대 주주가 됐고, 국방부는 자국 유일의 회로류 기업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나아가 1,000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데이터센터 사업에 연방 토지와 보조금을 지원했다. 관세 장벽을 통한 압박도 여기에 포함된다.

유럽연합(EU)은 유럽을 ‘AI 대륙’으로 만들겠다고 5년간 2,000억 유로(약 335조 원) 규모의 지출 계획을 발표했다. AI 발전은 국가와 기업을 더 밀접하게 융합시키고 있다. AI가 경제 경쟁의 최전선이자 최첨단 군사 기술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에서 입증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근 국가자본주의적 양상이 강화되는 점이 신자유주의와의 ‘단절’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 간 경쟁 격화라는 새로운 조건에 맞춰 자본주의가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세계는 레닌과 부하린이 분석 대상으로 삼았던 바로 그 시기를 점점 닮아 가고 있다.

제국주의 경쟁 속으로

국가자본주의적 축적의 ‘기적’으로 불린 한국도 신자유주의 시대를 지나 다시 국가자본주의 시대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모양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국면의 수혜자이면서도 국가자본주의의 유산(은행에 대한 통제 등)이 지속돼 왔기 때문에 그 변모가 극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선진국들을 빠르게 추격하는 양상은 부하린 시대에 영국의 지위를 추격하던 독일, 러시아, 일본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이런 행보가 박정희의 국가자본주의적 ‘관치’와 다른 점이 있다. 첫째, 무대가 다르다. 옛 발전국가는 미국이 관리하는 자유무역 질서의 우산 아래서, 그 질서에 올라타 수출로 성장하는 전략이었다. 지금은 그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반도체 공급망은 안보를 이유로 갈라지고, 동맹국 사이에서도 보조금과 관세를 동원해 상대국 기업을 밀어내는 경쟁이 치열하다. 둘째, 주역이 다르다. 과거 국가 주도 발전이 후발국의 추격 수단이었다면, 지금은 최선진국인 미국 자신이 국가자본주의적 개입을 가장 공세적으로 재개하고 있다. 그만큼 경쟁의 강도와 위험도 커졌다. 이재명 청와대의 메가프로젝트는 이 새로운 각축전의 출정식 같았다. 셋째, 그림에도 지금은 군사정권 당시처럼 국가가 자본의 투자 지휘관 구실을 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투자 브로커 비슷하다.

레닌과 부하린이 당대에 내린 결론처럼 세계 분할전은 누군가의 악의가 아니라 집적이 강제한 방법이고(레닌), 국가자본주의의 트러스트는 그 경쟁이 강제한 형태이며(부하린), 따라서 그 안에서 ‘착한 산업정책’을 고르는 길은 없다.

부하린이 이 분석에서 끌어낸 예측은 불길한 것이었다. “국가자본주의 트러스트의 군사력이 경제적 투쟁을 위한 무기이기 때문이다.”(앞에 인용된 책) 국가 단위로 조직된 경제 경쟁은 결국 군사 경쟁과 연결되며, 20세기 전반부의 그 연결은 실제로 양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메가프로젝트에서 군사 항목들은

굳이 찾을 필요도 없이 겉으로 드러나 있다. 반도체 ‘선도전’의 투자 대상에는 국방반도체가 명시됐다. 정부가 선제 구매할 로봇의 용처에도 국방이 들어갔으며, 행사에는 방위사업청이 참석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국방예산을 8퍼센트 증액하면서 국방 전 분야에 AI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체불가 대한민국”?

부하린은 국가·자본 융합체 안에서 국가의 힘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적했다. “국가자본주의 트러스트의 최대 주주인 현대 국가는 가장 고도의,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완성된 국가조직이다. 현대 국가의 거대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권력은 여기서 탄생한다.”(앞에 인용된 책) 국가가 “총자본가”가 될수록, 노동자를 향한 국가의 권위 표명 의지도 함께 커진다는 것이다.

그 힘이 어디에 쓰일지 보여 주는 단서도 이미 나왔다. 당정 협의를 거치고 있는 메가특구특별법 잠정안에는 특구 내 일부 노동자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가 담겼다. 올해 1월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될 때는 빠졌던 조항이 ‘국가 대 국가 경쟁’의 이름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서민 전기요금은 인상하면서 데이터센터용 저가 전기요금제를 도입하고, 지역 주민의 물과 전기를 공단으로 돌리는 계획과 강제수용 속도전까지 추진한다.(물과 전기, 핵발전 문제는 관련 기사; 메가프로젝트가 노동자·서민에게 내민 청구서를 참고하라.)

이러한 추세는 (‘국익’의 이름으로) 애국주의도 강화한다. ‘국가 전 구성원의 단결’과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이를 암시한다. 국경 안팎의 노동자들이 ‘국익’ 경쟁의 수단이 됨과 동시에 그 비용을 치른다.

메가특구법의 주52시간 예외 조항, 국방예산 증액, 무기 수출 드라이브를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 물과 전기와 안전을 빼앗기게 될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의 저항을 지지해야 한다. 노동계급은 자국 지배계급의 국제 경쟁 드라이브 반대편에 서야 한다는 110년 전 레닌의 정치적 결론은 오늘날에도 적용돼야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패배 뒤집으려는 트럼프의 책략으로
격화되는 호르무즈해협 충돌

미국-이란의 교전이 격화된 이유는 단순하다. 도널드 트럼프가 패배를 승리로 뒤집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2월 28일 이란을 함께 공격하는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의 설득에 응한 것은 그것이 식은 죽 먹기일 거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는 1월 3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벌인 무도한 기습을 이란을 상대로도 재연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미군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현직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와 그의 아내 실리아 플로레스를 사로잡아 뉴욕의 감옥에 처넣었다. 마두로의 부통령이자 권한대행을 맡은 델시 로드리게스는 미국에 고분고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는?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는 왓츠앱 메신저로 로드리게스에게 지시를 줄줄이 내리는 “베네수엘라의 사실상 총독이 됐다. ... 미국 재무부가 베네수엘라의 수출 수익 대부분을 수령하고 베네수엘라 은행 체계를 통해 베네수엘라로 배분해 준다. 용돈을 주는 부모와 자녀와 다름없는 관계다.”

트럼프는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이란 최고위 장성들을 개전하자마자 몰살하면 이란을 손에 넣고 세계 에너지 유통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을 더한층 강화할 수 있으리라 낙관했다. 그러나 이란의 새 지도자들은 로드리게스처럼 꼬리를 내리기엔커녕 자국의 막강한 정밀 타격 능력을 이용해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를 불바다로 만들고 미국의 걸프 연안 우방국들의 경제 모델에 타격을 가하고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했다. 그 해협을 다시 개방해 전 세계 경제에 대한 걸프 연안국들의 석유·가스 수출을 재개하는 것은 4월 8일 미국이 휴전에 응한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뒤이어 6월 14일에는 향후 60일간 최종 협상의 틀을 마련하는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트럼프는 양해각서 체결의 목표를 SNS에서 이렇게 밝혔다. “만국의 선박들이여, 엔진을 켜라. 석유가 흐르게 하라!” 이 양해각서는 이란에 대한 양



트럼프는 양해각서를 준수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

보 조항으로 가득했고, 미국이 서아시아에서 벌여 온 “끝없는 전쟁”을 지지하는 네오콘들은 그런 양보를 한목소리로 비난했다.

그들은 트럼프가 양해각서를 준수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트럼프의 목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미사일 재고를 보충하고 무엇보다도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장악력을 약화시킬 시간을 버는 것이었다. 양해각서 제5항은 다음과 같다. “이란이슬람공화국은 상선들이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또 그 반대 방향으로 안전하게 항행하게 할 방안을 최선을 다해 마련하고 향후 60일 동안만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그에 따라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을 계속 통제하게 됐다. 그러나 이미 5월부터 미 해군은 호르무즈해협 남쪽의 오만 해안을 따라 상선을 인도하고 있었다. 이런 일은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도 계속됐다. 그러나 이란은 상선들이 호르무즈해협 북쪽의 이란 해안을 따라 항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해각서

이제 이란은 호르무즈해협 남측 항로를 오가는 배들을 공격함으로써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관철시키고 있다. 이것은 단지 양해각서와 부합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을 통제하면서 얻는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또, 이란은 신의 없는 트럼프를 극도로 불신하고 있다.

미국의 보복으로 상황은 양측이 서로의 기지를 타격하는 수준으로 격화됐다. 트럼프는 이란 지도부를 “쓰레기”라 부르며 이란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고 이전에 한 경제적 양보를 거둬들이겠다고 하는 등 험악한 말을 또 다시 쏟아내고 있다. 아직까지 충돌은 비교적 제한적이다. 많은 논평가들은 십중팔구 이란은 트럼프가 또다시 먼저 꼬리를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리라고 본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트럼프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재개되는 것을 감수할 형편이 못 된다. 하지만 이란 정권의 생존에 호르무즈해협 통제는 필수 요소가 됐다. 그 해협을 통제하는 데 이란은 베네수엘라처럼 미국의 속국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에드워드 루스는 앞으로 “불만족스런 대화가 가다서다 지리하게 이어지고, 간혹 충돌이 벌어지고, 누가 사태를 통제하는지 트럼프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이란이 트럼프가 매인 목줄을 주기적으로 잡아채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 내다봤다. 하지만 사실 어느 누구도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책략은 또 다른 처참한 전쟁을 촉발할 수도 있다.

번역 김준효

공개 토론회

관심 있는 주제, 가까운 지역을 찾아보세요

더 많은 공개 토론회
상세 정보



서울 서부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AI, 성장의 새로운 견인차인가 거품인가?

일시 7월 15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한빛빌딩 A동 2층 강의실 60 (동대입구역 4번 출구 도보 5분)

발제 강동훈 <노동자 연대> 경제 담당 기자

참가비 4,000원 (학생·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 서부 지역 모임들 문의 010-8074-2793 / s-west@ws.or.kr

서울 동부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AI, 성장의 새로운 견인차인가 거품인가?

일시 7월 16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바인그림 빌딩 10층 1004호 (신설동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분)

발제 강동훈 <노동자 연대> 경제 담당 기자

참가비 5,000원 (학생·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 동부 지역 모임들 문의 010-5731-7299 / s-east@ws.or.kr

부산/울산

젠더는 무엇이고, 왜 새로운 전장이 됐나?

일시 7월 19일(일) 오후 3시 장소 부산 하이텐스터디룸 3층 a-sm강의실 (서면역 2번 출구 도보 5분)

발제 성지현 <노동자 연대> 기자

참가비 5,000원 (학생·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부산/울산 지역 모임들 문의 010-8028-8029 / busan-ulsan@ws.or.kr

장윤기 사건과 관련된 정치적 쟁점들

최일봉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장윤기의 범행은 ‘우발적’ 살인이 아니다. 정황상 ‘계획적’ 살인이다

장윤기가 저지른 여고생 살해를 현장에서 갑자기 발생한 ‘우발적 살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는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고생을 계획적으로 납치하려 했다. 살해 목적으로 다른 여성(동남아시아 국적)을 찾아다녔고,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피해자의 저항이나 범행 발각에 대비해 살해까지 염두에 뒀을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다만, ‘성폭행 후 살해’를 구체적으로 계획했는지는 재판을 통해 추가로 규명해야 한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시도한 자가 피해자를 살해할 때 성립한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계획적 살인’ 여부는 별도의 사실 판단 영역이며, 형량을 가중하는 주요 양형 요소로 작용한다. 동남아시아 국적 여성 살해 계획은 여고생 살해 계획을 추론할 중요한 근거다. 장윤기는 성폭행과 살인을 서로 전혀 별개의 행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성을 강제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필요할 경우 살해하는 일련의

범행을 구상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여기서 ‘성폭행 후 살해하기로 확정했다’는 것과 ‘저항·신고·신원 노출 등의 상황이 생기면 살해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현재 공개된 증거는 후자의 ‘조건부 살해 계획’ 또는 ‘살해 가능성을 예정한 범행’을 시사하지만, ‘성폭행을 마치면 무조건 살해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직접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장윤기의 방에서 발견된 리얼돌이 여러 조각으로 훼손돼 있었는데, 특히 가슴과 목 부위가 집중적으로 훼손됐다. 가슴과 목은 실제 여고생이 공격당한 부위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사람 형상의 성인용품’을 상대로 치명적 부위를 찌르며 폭력적 성적 환상을 실행하거나 실제 공격을 연습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은 완전히 합리적이다. 다만, 훼손된 물건만으로 살인 연습을 직접 증명하기는 어렵다. 특히 그의 경찰 간부 아버지가 해당 리얼돌을 폐기해 정밀한 추가 검증이 어려워졌다. 이런 정도의 핵심적인 증거 인멸이(형법상 ‘친족 특례’에 따라) 형사 처벌에서 면제되는 것은 직관적으로 부당하다.



고故 이채원 여고생의 터무니없는 죽음에 대한 분노와 가해자 엄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장윤기 사건은 여성 대상 성폭력이 더 큰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번 사건은 여성 대상 폭력이 얼마나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성폭행은 성욕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폭력 문제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살해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성폭행이 얼마나 쉽게 치명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피해자 자신이 목격자라는 이유에서도 성폭행은 때때로 살인으로 이어진다.

현재까지 드러난 범행만으로도 죄질은 극히 나쁘다. 그러나 사실은 아직 다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수사

기관은 디지털 자료와 통신기록,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하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성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거나 뒤늦게 용기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여죄 여부는 끝까지 확인돼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지 잔혹한 강력범죄의 하나가 아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이 어떻게 반복되고, 어떻게 더 큰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 6면으로 이어짐

▶ 5면에서 이어짐

왜 진실이 묻힐 뻔했는가: 경찰의 부패, 조직 보위를 위한 은폐

장윤기 사건의 진실은 경찰의 초동 수사가 아니라 이후 진행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부실수사’를 넘어 경찰 조직의 구조적 유착 의혹과 은폐 혐의로까지 번졌다.

사건 직후 광주 광산경찰서는 장윤기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성폭행 목적 범행이라는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은 충격적이었다. 장윤기의 차량에는 피해자를 결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케이블타이가 있었다. 주거지에서는 특정 부위가 심하게 훼손된 리얼돌이 발견됐다. 경찰이 확보하지 않은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도 검찰이 다시 수색해 찾아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 결과도 검찰 송치 과정에서 누락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채증영상과 일부 수사자료도 처음에는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만 문제였다면 단순한 실수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중요한 증거들이 거듭 확보되지 않았고, 확보된 자료조차 제대로 넘겨지지 않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성폭행 목적 범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들이었다.

장윤기 사건은 이제 살인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사건이 진행될수록 훨씬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경찰 수사 과정이었다. 초동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성폭행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고, 피의자의 아버지인 현직 경감은 수사 정보를 전달받아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 것은 장윤기의 아버지 장 경감이었다. 수사



피해 여고생의 유족은 “경찰은 살인자의 편”이라고 절규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과정에서 장윤기의 집 비밀번호와 수사 상황이 아버지에게 전달됐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아버지는 이후 장윤기의 주거지에 들어가 경찰이 압수하지 않은 리얼돌을 해체해 버리고, 장윤기의 이전 휴대전화를 불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던 케이블타이도 나중에 아버지의 집에서 발견됐다.

그가 어떤 경로로 그것을 가져가게 됐는지는 현재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이미 담당 수사팀장을 구속했고, 수사는 경찰서 지휘부와 광주경찰청 간부들까지 확대되고 있다.

뿌리째 흔들린 경찰 수사의 공정성

그러나 사람들은 묻고 있다. ‘경찰은 왜 장윤기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

히 ‘실수를 했다’는 말로 대신할 수 없다. 심각한 것은 단순히 증거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아니다. 경찰 내부에서 수사 정보가 피의자의 가족에게 전달됐다는 혐의 자체가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경찰 조직에서는 오래전부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반복돼 왔다. 같은 조직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보호하고, 내부 문제를 외부에 드러내지 않으려는 조직문화다.

이번 사건에서도 그런 문화가 작용했음이 틀림없다. 더구나 장윤기의 아버지는 해당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다. 일부 형사는 그를 ‘선배’라고 불렀다는 보도도 나왔다.

물론 이것만으로 조직적 공모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경찰 특별수사팀은 담당 형사들뿐 아니라 당시 경찰서장과 형사과장, 광주경찰청 간부들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사건을 단순히 현장 형사 몇 명의 판단 착오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수사 과정에서 언제든 실수할 수 있다. 증거 하나를 놓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수와 은폐는 다르다. 실수는 뒤늦게라도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 반면 은폐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과 누락을 낳는다.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혐의는 단순히 ‘압수하지 못했다’가 아니다. 왜 압수하지 않았는가? 왜 송치하지 않았는가? 왜 수사자료가 누락됐는가? 왜 피

의자의 아버지가 증거를 치울 수 있었는가? 왜 수사 정보가 외부로 흘러갔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지 못한다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 이번 사건을 경찰관 몇 사람의 도덕성 문제로만 볼 수 없다. 경찰은 막대한 강제력을 가진 국가기관이다. 체포하고, 압수수색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만큼 외부의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경찰 비위를 경찰이 조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조직 내부의 상명하복 문화는 책임을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숨기기 쉽게 만든다.

특히 피의자나 가족이 경찰 조직과 연결돼 있는 사건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이 보여 준 것은 바로 그 위험성이다.

현재 수사는 경찰 지휘부를 향하고 있다. 과연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처음부터 적용하지 않은 것에 누군가의 개입과 압력이 있었는지는 앞으로 차차 밝혀져야 할 것이다.

확실한 것은 이번 사건이 평범한 부실수사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기관이 특정 피의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는지, 즉 국가기관의 부패 여부를 규명하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장윤기 개인의 범죄 못지않게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감에게 수사 정보가 샀다는 혐의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

장윤기 사건의 진짜 쟁점은 국가기구다: 경찰·검찰 모두 신뢰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에 대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것은 어느 한 기관의 권한 독점이 아니라 국가권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민주적 통제다. (민주적 통제가 무엇인지는 6절에서 언급하겠다.)

경찰과 검찰은 서로 다른 조직이지만, 둘 다 자본주의 국가기구의 일부다. 따라서 어느 한쪽을 정의의 구현체로 보는 것은 착각이다. 그러나 국가기구가 하나의 의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권한과 이해관계가 다른 기관들이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감춰질 뻔한 진실이 드러나기도 한다. 장윤기 사건은 바로 그런 사례다.

장윤기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줬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일반 살인사건으로 마무리됐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검찰 보완수사권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이번 사건이 경찰은 부패한 반면 검찰은 정의롭다는 함의를 지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도 오랫동안 권력을 남용하고 정의를 훼손해 온 국가기관이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나 고위층 범죄에서 거듭 부실수사와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서는 여러 차례 무혐의 처분과 부실수사가 사회적 공분을 샀고, 결국 재수사와 진상조사가 이뤄졌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출입국 기록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신뢰가 또다시 크게 훼손됐다.

노동자 투쟁과 집회에 대해 업무방해죄와 집시법 등을 적극 적용하며 공권력을 앞세워 탄압해 왔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이런 사례들은 검찰도 결코 보통 사람들 편에 선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번 구체적인 사건에서 검찰이 한 역할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 장윤기 사건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이번에는 경찰이 성폭행



**장윤기 사건은
검찰을 신뢰하라고 말하는
사건이 아니다.
동시에 경찰에 수사권을
독점시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보여 준 사건이다**

살인의 실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고,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이를 드러냈다.

불편하더라도 사실은 사실이다. 문제는 여기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느냐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권한을 대폭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쪽에서는, 검찰개혁을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는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둘 다 문제의 핵심을 비켜 가는 것이다. 장윤기 사건이 보여 준 것은 검찰이 훌륭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상 경찰에 수사권을 독점시키는 것 역시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이다.

장윤기 사건과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

국가기관은 어느 하나도 스스로를 통제하지 않는다. 경찰은 조직을 보호하려 하고, 검찰 역시 조직을 보호하려 한다. 경찰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 왔고, 검찰도 마찬가지였다.

권한이 집중될수록 권한 남용의 위험도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보

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보완수사는 경찰의 판단과 증거 확보를 다시 검증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이런 최소한의 장치마저 사라진다면 경찰의 초동수사에서 발생한 은폐를 바로잡을 제도적 수단은 더욱 약해질 수 있다.

물론 보완수사권이 언제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이용해 사건 처리를 늦추거나, 수사의 방향을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바꾸거나, 특정 사건을 과도하게 확대 또는 축소할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정치적 수사, 권력 비호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보완수사권의 일부 존속을 찬성한다고 해서 검찰 권한의 재강화를 지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경찰에 독점시키는 것도 위험하고, 검찰에 독점시키는 것도 위험하다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민주적 통제다.

장윤기 사건은 검찰을 신뢰하라고 말하는 사건이 아니다. 동시에 경찰에 수사권을 독점시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보여 준 사건이다. 검찰도 믿을 수 없고 경찰도 믿을 수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 장치나마 실효성 없애서는 안 된다.

그러나 수사기관끼리의 견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누구나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노동자 등 보통 사람들의 조직된 힘이 국가기관의 폐쇄성과 권한 남용을 끊임없이 견제해야 한다.

경찰은 왜 그토록 부패했는가

장윤기 사건을 보면 “경찰이 어떻게 이 정도까지 썩을 수 있나” 하는 분노가 드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경찰관 개개인이 모두 부패했다고 일반화하기보다는, 경찰 조직이 부패와 은폐를 낳고 보호하기 쉬운 구조를 지녔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

장윤기 사건에서 특히 충격적인 것은 단순한 무능이나 실수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황이 겹쳐 있다는 점이다.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확보되지 않거나 사라지고, 수사 정보가 피의자의 경찰 간부 아버지에게 전달됐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이제는 현장 수사팀 뿐 아니라 경찰서 지휘부가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을 막았는지도 수사 대상이 됐다. 아직 뒷선 개입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두 사람의 사소한 착오로 치부할 단계는 지났다.

제 식구 감싸기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첫째, 경찰 조직은 강한 동료 의식과 상명하복 문화로 묶여 있다. 경찰 업무는 동료의 협조와 보호에 크게 의존한다. 위험한 현장에서 서로를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지만, 이것이 변질되면 “우리 식구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폐쇄적 연대가 된다. 특히 피의자나 그 가족이 현직 또는 전직 경찰이면, 개인적 친분이 없어도 같은 조직 사람이라는 이유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할 가능성이 커진다.

장윤기의 아버지가 해당 경찰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일부 경찰이 그를 선배로 대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돈을 주고받는 고전적 뇌물 부패라기보다 조직 인맥을 이용한 특혜와 은폐에 해당한다. 이런 종류의 부패는 당사자들이 그것을 부패라고조차 인식하지 않고 “선배를 돕는 것”, “동료의 사정을 봐주는 것”으로 합리화하기 쉽다.

둘째, 내부 감찰이 독립적이지 않다. 경찰의 잘못을 경찰이 조사하고,

▶ 8면으로 이어짐

▶ 7면에서 이어짐

같은 지방경찰청이나 같은 계통의 부서가 감찰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다른 경찰 사건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수사관과 감찰 담당 부서가 같은 경찰청 수사 계통에 속해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제기됐다.

내부비리 신고센터나 시민감찰위원회 같은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신고자는 이후의 인사·근무 관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 내부에서 상관이나 동료의 비위를 폭로하는 것은 일 자리를 걸어야 하는 일이 되기 쉽다. 결국 공식적인 감찰 장치가 있어도, 조직 전체가 사건을 축소하려 하면 초기에 제동을 걸기 어렵다. 경찰 자체 연구도 오래전부터 사후 적발 중심의 감찰에서 독립적이고 예방적인 상시 감사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셋째, 권한은 큰데 외부 통제는 약하다. 경찰은 현장 통제, 체포, 압수수색 신청, 피의자 조사, 증거 수집, 혐의 판단, 송치 여부 등에 막대한 실질적 권한을 갖는다. 일반 민간인에게는 경찰이 작성하는 최초 수사기록이 사실상 사건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한다.

문제는 수사 초기 경찰이 증거를 압수하지 않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외부 기관이 나중에 그것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같은 차량과 주거지를 다시 조사하면서 경찰이 확보하지 않은 자료를 찾아냈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난 특수한 사례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일반 살인 사건으로 굳어졌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곧바로 “그러므로 검찰에 강력한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결론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검찰 역시 폐쇄적 관료 조직이고 수많은 봐주기 수사와 정치적 수사를 벌여 왔다. 핵심은 경찰과 검찰 중 어느 한 기관이 선하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특히 강제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라면 더욱더)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 조직은 부패와 은폐를 낳고 조직 보위하기 쉬운 구조적 문제를 지녔다

넷째, 경찰 조직은 진실보다 조직의 평판과 지휘 책임을 먼저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다. 사건 초기에 경찰의 잘못을 인정하면 수사팀장, 형사과장, 경찰서장, 지방청 지휘부까지 책임 문제가 번질 수 있다. 그래서 초기에 작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뒀다가, 은폐를 유지하기 위해 더 큰 조작과 누락이 이어질 수 있다. 이를테면 처음에 케이블타이를 압수하지 않은 것이 실수였다고 해도, 그 사실을 솔직히 기록하고 즉시 보완했다면 사건은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채증영상이나 수사보고서까지 삭제·누락했다면, 그때부터 목적은 수사가 아니라 경찰 자신의 책임을 피하는 것이 된다. 조직의 체면을 지키려는 행동이 결국 범죄 피의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두 번 짓밟는 결과를 낳는다.

다섯째,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는 기관이라는 성격보다는, 국가권력과 지배계급의 이익을 지키는 기관이라는 성격이 훨씬 크다. 경찰은 단순한 공공 서비스 기관이 아니다. 경찰은 기존 소유와 질서를 강제력으로 유지하는 국가기구의 일부다. 노동자 파업, 철거 저항, 집회에서는 시민에게 매우 공격적인 경찰이 대기업, 고위관료, 조직 내부 사람에게는 유독 관대한 일이

반복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물론 이는 경찰이 살인 용의자를 잡는 등 필요한 일을 한다는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다. 국가기관은 기본적 치안 기능도 수행한다. 그러나 경찰의 궁극적 우선순위는 보통 사람들의 안전과 정의보다는 국가의 권위, 조직의 안정, 지휘 체계와 기존 질서의 유지에 놓여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인 평범한 여고생과 동남아시아 국적 여성의 권리보다 경찰 간부 아버지와 경찰 조직의 이해관계가 앞섰다면, 그것은 몇몇 악질 경찰관만의 도덕적 타락으로 설명할 수 없다. 권력과 인맥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국가기관의 구조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여섯째, 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낮은 인식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훼손된 리얼돌, 결박용으로 의심되는 케이블타이, 앞선 성폭행 정황 등을 각각 “직접 관련이 없다”고 떼어 놓으면 성범죄 목적을 놓치기 쉽다. 피해 여성을 납치·통제하려 한 전체 행동 양식을 보지 않고, 살인이 일어난 순간만 좁게 보면 우발적 살인처럼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기술 부족 문제가 아니다.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과 통제 욕

망을 사소한 사생활이나 기이한 취향 정도로 취급하는 조직문화와도 관련될 수 있다. 특히 앞서 피해를 입은 동남아시아 국적 여성의 신고나 피해가 처음부터 충분히 중시됐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 여성은 성·인종·계급 삼중의 차별을 받은 것일 수 있다.)

그래서 “나쁜 경찰 몇 명을 엄벌하라”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수사팀장과 지휘부의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변화가 함께 필요하다.

제도적 변화

경찰 비위는 경찰 지휘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수사해야 한다.

수사 과정의 압수·미압수 판단과 증거 목록, 현장 채증자료를 자동 보존하고 사후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관이나 그 가족이 관련된 사건은 처음부터 다른 지방경찰청이나 독립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한다.

내부 고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피해자와 유족이 수사기록 누락과 증거 미확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경찰권 확대에 상응하는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장윤기 사건에서 가장 끔찍한 점은 경찰이 단지 범행을 관대하게 처리할 뿐했다는 것이 아니다. 경찰 내부의 연줄이 있다면 흉악 범죄의 죄질까지 축소되고, 결정적 증거가 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줬다는 점이다.

이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것을 일부 개인들의 비리가 아니라 국가기관이 성폭행 목적 계획 살인 피의자를 비호한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고 불러야 한다.

6절 ‘민주적 통제: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아래로부터의 권력’을 포함한 전문을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임금, 임금격차, 연대

마르크스주의의 관점

김하영 지음, 120쪽, 4,000원

-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 직무급제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 임금격차와 노동조합
- 노동시장 분절은 노동계급을 해체시키나?
- 격차를 줄이는 임금 대안?
- 투쟁 역학으로 보는 임금격차 축소와 연대



소책자 구입하기
ws.or.kr/book/39431



왜 많은 십대가 극우 주장에 끌리는가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하다. 그러나 이 논란은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다. 많은 십대, 특히 남학생 사이에서 극우적인 조롱과 혐오 표현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 말이다.

십대 남성이 십대 여성에 비해 극우 주장에 더 이끌리는 현상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성차별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성적·외모·남자다움 등 십대 남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압박도 커지는 현실에 대한 반발이 작용하는 듯하다.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직후에도 ‘십대 극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다. 당시에는 극우 개신교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십대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것이 정치적 주목을 받았다.

이번에 새삼 확인된 것은 극우 ‘밈’(비유전적 문화 요소)이 교실 안에 광범하게 확산돼 있다는 사실이다. 조직화된 운동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으나, 많은 십대가 일상적인 온라인 공간에서 분산적으로 쏟아지는 극우 주장에 상당히 노출돼 있음을 보여 준다.

물론 십대 전체가 극우화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위안을 얻을 사실은 아니다.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기도를 겪으면서 많은 십대가 극우적인 조롱과 혐오 표현을 더 많이 쓴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한국일보》, 2025년 9월 2일 자). 대다수 교사도 학교 내 극우적 혐오 표현이 심각하다는 데 동의한다(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2026년 7월 1일 자 발표).

많은 십대의 조롱과 혐오 표현의 소재는 민주당 소속 전·현직 대통령 비하, 중국 혐오, 여성 혐오, 역사 왜곡, 소수자 혐오 등이다.

이는 젊은 극우 유튜버들이 십대를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외부의 적 때리기’ 소재와 대체로 일치한다. 이제 저격, 좌표 찍기, ‘밈’을 활용한 조롱은 많은 십대에게 익숙한 문화가 됐다.

현재 많은 십대가 극단주의 주장에 끌리는 진입로는 주로 인터넷이다. 극우 추적단 ‘카운터스’는 십대가 많이 이용하는 인스타그램이 극우 콘텐츠로 심각하게 오염됐다고 경고했다.

인스타그램을 이용한다고 해서 사

람의 생각이 그렇게 극우적으로 바뀌겠느냐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십대가 인스타그램에 머무는 시간이 매우 길고,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오늘날 십대가 처한 물질적 조건과 밀접하다. 모든 세대가 그렇지만, 특히 십대는 외로움, 사회적 소외, 주체성 결여, 정치적 이반감 등을 겪고 있다. 이는 질풍노도와 같은 청소년기와 맞물리며 십대를 더한층 괴롭힌다.

요즘 십대가 타인과 직접 소통하며 보내는 시간은 극도로 적다. 예컨대, ‘학원·학습지·온라인 학습’ 때문에 친구와 직접 만나 놀지 못한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위원회 실태 조사).

반면 십대의 주간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20시간에 달한다(여성가족부, ‘2024 청소년 통계’). 십대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는 ‘소통’이다. 이런 온라인 공간이 십대에게 사회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다른 시각이나 기존 생각에 도전하는 견해를 접할 기회가 제한되는 ‘에코 챔버’ 또는 ‘필터 버블’ 효과가 나타난다.

금기

그렇다면 십대가 극우 콘텐츠에 빠져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날 극우 콘텐츠는 과거의 무겁고 딱딱한 정치 선동과 다르다. 여행·미용·예능·아이돌 등 일상적인 소재를 폭넓게 다룬다. 이들은 일상 채널 사이에 극우적 혐오 표현을 교묘히 끼워 넣는다. 예상치 못하게 일상적 공간이 극우 포섭의 장으로 활용되는 셈이다. 미국 극우가 이런 수법을 선도적으로 써 왔다.(미국 극우가 혐오 표현을 일상화하는 공간과 사례들은 신시아 밀러 이드리스의 《극우는 어디서 태어나는가》(동아시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극우적 혐오 표현은 용기 있는 소신 발언으로 포장된다. 주류 사회의 위선에

맞서 싸우는 ‘진정한 반역자’나 ‘표현의 자유 수호자’를 자처하는 방식이다.

사회에 제 자리가 없다고 느끼는 많은 십대는 직설적이고 과격한 극우 주장을 금기를 깨는 짜릿함이자 기성 사회에 대한 반항심의 분출로 받아들인다. 위선적인 학교 교육이나 기성 사회의 권위를 조롱하며 십대 나름의 불만이나 불안을 해소하는 배출구로 삼는다.

진짜 문제는 극우가 매우 체계적으로 십대를 겨냥한다는 점이다. 좌파 운동에 치명적인 위협은 조직화·정치화된 극우 세력이다. 극우에 우호적인 개인들의 존재는 극우 운동의 인간 재료가 된다. 그러나 이들의 의식과 행동은 객관적 상황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지 않는다. 대부분 극우 운동과 조직이 목적의식을 갖고 진행한 교육·선전·활동·동원의 결과다.

김종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연구교수는 인스타그램에서 대표적인 극우 콘텐츠를 생산하는 곳으로 ‘자유대학’을 지목했다. ‘자유대학’은 윤석열의 계엄을 옹호하며 탄핵을 반대했던 대학생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극우 단체다. 김교수는 이들의 콘텐츠가 “세련된 시각적 전략을 활용해 언론 매체와 유사한 외관을 갖추고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했다(다큐 뉴스타파 ‘2026 10대 극우화 보고서, 소년 극우가 온다’).

모니터 밖 세계

사정이 이렇다면 십대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하는가? 오스트레일리아는 2025년에 16세 이하 청소년 대상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를 시행했고, 유럽 일부 국가도 유사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더는 관련 논의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극우 주장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십대에게 mim처럼 번지는 상황은 우려스럽다. 그러나 십대를 온라인으로 내모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면 수많은 십대는 더 고립될 것이다.(더 자세한 비판은 본지에 양효영이 쓴 ‘10대 소

셜미디어 금지 조치 만지작거리는 일부 정치인들’을 보시오.)

교육과 사회적 돌봄망 구축이 또 다른 해법으로 제시된다. 이는 십대의 소셜미디어 과몰입과 건강 위기에 대처하는 데서 마땅히 필요한 조치다. 문제는 이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지배계급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배계급의 저항에 의해 좌절되기 쉽다.

결국 노동자 투쟁의 전반적 활성화가 필수불가결하다. 이런 해결책은 십대가 겪는 문제가 보편적인 사회적 고통의 일부라는 점과도 연결돼 있다.

지금의 십대는 자본주의의 경제적 쇠퇴 속에서 나고 자랐다. 글로벌 금융 위기 때 태어났고, 청소년기에 접어들자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했다. 이 위기들은 구조적 불평등, 사회적 고립감을 크게 심화시켰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공정을 약속하며 출범한 민주당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때문에 많은 십대는 위선적 ‘진보’에 대한 피로감과 도덕적 혼란에 대한 거부감을 느낀다.

여기에 “시험 잘 본 사람만 대접받게 공정하다”라는 극단적 능력주의 말고는 다른 사회적 공존 방법을 배우지 못한 십대에게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역차별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많은 십대들은 숨막히는 입시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냉소를 사회적 약자, 이주노동자, 특정 국가와 국민에 대한 혐오(반중과 혐중)로 표출하기 쉽다.

그러나 우울한 전망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아래로부터의 거대한 운동이 일어나 십대가 모니터 밖 세계의 실질적 변화를 실감한다면 얼마든지 가치관은 바뀔 수 있다.

십대의 고통을 해결하려면 극우와 자본주의 시스템에 맞서는 대중 운동이 진정으로 필요하다. 이런 운동을 건설하려면 정당성 위기를 겪는 기성 정치 시스템을 옹호하는 데 급급한 자유주의적 진보 정치가 아닌 급진적 좌파 정치가 필요하다.

김인식

제국주의의 가속되는 위기

세계적 시스템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가속되고 있다. <노동자 연대> 신문 국제팀이 현 국제 정세의 중요한 특징들을 살펴본다. 극우의 전진과 그에 맞선 투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이 글의 전문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두 주요 전쟁으로 살펴보는 제국주의 위기

제국주의 위기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두 전쟁 모두 쇠락하는 제국주의, 특히 미국 제국주의를 방어하려는 것에서 비롯했다. 미국 제국주의의 쇠락은 현재 국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이다.

이란 전쟁은 이스라엘의 인종학살에서 비롯한 것이기도 하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대응해 단지 네타냐후뿐 아니라 이스라엘 지배계급이 인종학살로 대응했다. 이는 끔찍한 고통을 낳았을 뿐 아니라, 중동 전체를 불안정에 빠뜨렸다. 이스라엘 국가가 자기 영토 안에서 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없다는 것이 갈수록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지배계급이 보기에 유일한 탈출구는 전선을 확대하고 다른 중동 국가들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특히 미국을 설득해 이란을 공격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다.

트럼프의 또 다른 특별한 관심사 하나는 에너지 공급에 대한 통제력이다. 트럼프는 이란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세계 에너지 공급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계산 하에서 네타냐후와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가 낭패를 봤

다. 이란은 드론과 미사일 등을 활용해 반격할 수 있었고,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이는 중동 전역에 파장을 일으켰다.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 미국의 중동 우방국 지배계급들은 미국이 더 이상 자신들을 지켜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게다가 이란은 이제 아랍 세계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란 덕에 미국과 이스라엘이라는 악당들이 오랫동안 겪어 본 적 없는 곤욕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랍 지배계급은 이러한 안보·정치 불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논리적으로는 중국을 향할 것이다. 중국은 중동 에너지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란 전쟁의 파장은 중동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중동 바깥의 지배계급도 이런 물음을 던질 것이다. '이란조차 제압하지 못하는 미국이 중국을 제압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중국은 태평양에서 미국을 몰아내려고 군사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란 전쟁은 세계적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둘러싼 상황은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듯하다. 트럼프는 이란을 쓸어버리겠다는 엄포를 종종 놓지만, 이란이 쉽게 굴복할 상대가 아님을 잘 안다. 그런 상



이란 전쟁에서 미국은 중동 우방들을 방어하고 호르무즈해협을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

황에서 최선은 협상하는 것이다.

물론 그 과정은 결코 단선적이지도 매끄럽지도 않을 것이다. 미국과 이란이 몇 차례 더 교전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협상을 파토 내려 하고 있다는 점도 봐야 한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자. 러시아가 2022년 2월 최초의 공세에 실패해 우크라이나를 정복하지 못했다. 미국은 이에 고무돼 유럽의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를 상대로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을 벌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나토 강대국들의 애초 예상보다 훨씬 물리치기 힘든 상대임이 드러났다. 트럼프 정부 하에서 미국이 한발 물러서려 하는데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은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주도적인 구실을 하고 있다. 미국의 패권 유지 전략이 변화하는 가운데 유럽이 러시아를 상대하는 데서 더 큰 역할을 맡게 됐다.(물론, 미국이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표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서방의 지원 속에서 이란과 마찬가지로 드론과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켰다. 이제 이를 활용해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타격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돈이 커지고 있다. 아무리 무소불위의 통치자일지라도 자국 수도가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당한다면 체면을 구길 수밖에 없다. 게다가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를 감수할 처지가 아니다. 이 데올로기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그 전쟁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푸틴이 전쟁을 확대할 가능성이 만만찮게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연합의 공급 사슬을 타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유럽 지배계급은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날마다 높이고 있다. 각국 유럽 국가의 지배계급이 한목소리로 재무장을 외치고 있다. 이러한 전쟁 노력과 군비 증강, 그에 따른 긴축은 곳곳에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비록 그 과정은 매우 불균등하겠지만 말이다.



(U)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까지 타격하며 전쟁의 판돈을 키우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까지 타격하며 전쟁의 판돈을 키우고 있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중요성



사진 출처: Guy Smallman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인종차별 반대를 매개로 반극우 운동과 연결될 수 있다.
사진은 영국의 그런 집회

세계적으로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 극우에 맞선 투쟁, 이주민 방어 투쟁, 군비 증강에 따른 긴축 정책에 맞선 투쟁 등 많은 투쟁들이 저마다의 중요성을 띠고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투쟁들은 시스템 전반의 위기를 통해 서로 연결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특히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다른 운동에 활력을 제공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예컨대 영국 런던에서 지난가을 극우가 10만 명을 동원한 이후, 반극우 전선의 돌파구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반극우 운동에 합류시켜 3월과 5월에 극우를 압도하는 대규모 동원을 이뤄낸 것이었다.

물론,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규모와 수준은 나라별로 상이하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계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 주는 창문과 같은 구실을 하고 있다. 제국주의가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중동이 부분적으로 안정된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인종학살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계속 자극할 것이다. 그 운동은 부침을 겪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다른 투쟁들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연결은 결코 자동적이지 않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가장 크게 일어난 영국에서도 반극우 투쟁으로의 합류는 결코 자동적이지 않았고, 극우에 맞서는 특별한 투쟁이 있어야 하는 이유 등을 둘러싼 여러 논쟁을 거쳐야 했다.

또, 가자의 참상에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은, 운동 내에서 정례화된 광범한 대규모 거리 행진이나, 소수의 투쟁적인 직접 행동이나 하는 잘못된 양자택일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혁명가들은 대규모 행동과 투쟁성을 결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탈리아의 팔레스타인 연대 총파업이 그런 사례다.

물론 그것이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다. 본지는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그런 행동이 가능했는지에 관해 이미 몇 차례 다룬 바 있다. 팔레스타인 연대 파업이 일어난 또 다른 나라인 그리스에서도 그것을 가능케 한 조건이 있었다. 비교적 느슨한 노동조합 구조, 혁명적 좌파가 일부 노조에 내린 뿌리, 시리자의 와해가 혁명가들에게 얼마간 제공한 운신의 폭 등이 그것이다.

혁명가들은 이런 경험에서 배우고 자신이 처한 조건에서 틈새를 찾아내 운동을 발전시키는 데 이용해야 한다.

온갖 불안정을 폭발시킬 AI 거품

AI 투자 물결 또한 현 정세의 중요한 요소다. AI 개발과 그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 규모는 1.5조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세계 비금융기업 자본 지출의 3분의 1에 달하는 양이다. 자본주의 역사상 이처럼 막대한 국제적 투자를 끌어들이 산업은 전례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AI는 금융 시스템, 특히 규제를 벗어난 '그림자 금융'에서 막대한 자금을 끌어오고 있다.

이는 온갖 긴장과 모순을 심화시킬 것이다. AI 경쟁은 현재 제국주의 간 경쟁의 최전선이다. 히토류 쟁탈전과 바이든·트럼프의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를 보라. AI 경쟁이 에너지 인프라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중동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또, 이스라엘은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부문을 매개로 서방의 경제와 통합돼 있다.

지배계급은 누가 AI에서 이익을 챙길 것이냐, 지금의 AI 붐이 거품이냐 아니냐를 둘러싼 물음에 사로잡혀 있다. 물론 그 상상을 계속 추동하려고 벌어지는 온갖 금융 술수들을 보면 그것은 분명 거품이다.(그렇다고 해서 생산적 경제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AI 거품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하다. 예컨대 트럼프는 이란과의 중요한 전쟁에서 패배하고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고 있지만, 미국 지배계급은 2021년 1월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습격했을 때와 달리 트럼프와 단절하지 않고 있다. 주가 상승이 자신들의 부를 불려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AI 붐은 미국 국내 정치를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그 거품의 붕괴는 온갖 불안정을 낳을 것이 확실하다.

혁명적 조직 건설하기

투쟁과 공동전선을 건설하면서 혁명가들은 자신들의 조직도 건설해야 한다.

제국주의의 위기와 극우의 전진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사태에 압도돼 무력감을 느끼기 십상이다. 혁명가들의 시험대는 이에 맞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제시하는 것이다. 90년 전인 1936년에 그 시험대는 스페인 혁명과 프랑스의 공장 점거 운동, 영국 케이블 스트리트 전투, 세계 대전에 맞선 행동이었다. 오늘날의 혁명가들도 그러한 도전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혁명적 조직을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그것은 젊은 사람들을 혁명적 이론으로 설득할 뿐 아니라, 운동 속에서 조직을 건설하는 실천에 끌어들이는 현재 진행형의 과정이다.

그러려면 혁명적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과 정치적 긴장을 빚는 대역적 명의 사람들을 주변에 두어야 한다. 그 긴장 속에서 그들과 논쟁을 벌이고 간행물을 판매하고 조직의 공개 행사에 초대

하는 등의 시도를 해야 한다. 이는 운동의 성장을 혁명적 중핵의 성장으로 연결시키는 데서 중요하다.

ws.or.kr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휴전을 앞당기기 위한 40일 공세 작전?
레드라인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 확산 위기 커지고 있다

★ 나토와 손잡고 제국주의 균열 틈새로 비집고 들어가는 이재명 정부

★ 홈플러스 청산 임박
저항 한번 못 하고 일자리 잃게 생긴 홈플러스 노동자들

★ 현대차 노동자들
임금 인상,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나서다

★ 영화평 <두 검사>
1937년 스탈린주의 소련 — 세기의 한밤중 어둠의 심연 속으로



메가프로젝트가 노동자 등 서민층에게 내민 청구서

2023년 여름, 이재명은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에 반대하며 수만 명을 거리로 불러 모았다. 3년이 지난 올해 7월 6일, 대통령이 된 그는 메가프로젝트 점 검회의에서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있느냐”며 (반핵을 뒤집는) 속도전을 주문했다.

메가프로젝트 계획에 포함된 서남권 반도체 팹 4기는 하루 65만 톤가량의 공업용수가 필요하다. 200만 명이 하루에 쓰는 수돗물에 맞먹는 양이다. 용인 클러스터에는 하루 150만 톤이 들어간다. 메가프로젝트는 장차 농사, 하천 생태, 지역사회의 삶에 쓰일 물을 뺏아들일 것이다.

유엔대학교 물·환경·보건연구소(UNU-INWEH)가 올해 낸 보고서《AI 에너지 사용의 환경 비용》은 같은 일이 세계 곳곳에서 이미 진행 중임을 보여 준다. 네덜란드 미덴메어의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는 극심한 가뭄이 든 2021년 한 해에만 물 8,400만 리터를 썼다. 애초 지역에 알려졌던 추산치 1,200만~2,000만 리터의 몇 배로, 물 사용을 둘러싼 농민들의 반발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 ‘데이터센터 수도’로 불리는 멕시코 케레타로에서는 오랜 가뭄으로 저수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확장을 거듭하는 데이터센터들이 냉각과 발전에 막대한 물을 끌어 써 지역민들의 물 부족을 키우고 있다.

2025년 세계 데이터센터가 쓴 전력은 448테라와트시 — 나라로 치면 프랑스 바로 다음, 세계 11위다 — 이고, 그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 물도 4조 5,000억 리터다.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전력 소비가 배 가까이 늘고 물은 9조 3,000억 리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3억 인구 전체의 연간 기초 생활용수와 맞먹으리라는 것이 보고서의 전망이다.

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가동되는 발전소와 그 발전소를 식히기 위해 사용되는 물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기후 위기의 시대



물은 고갈시키고, 땅은 달구고, 핵발전은 확대하고, 전기 요금은 인상하고. 미국 위스콘신주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AI 데이터 센터

에 말이다.

게다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안드레아 마리노니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한 논문에서 “데이터센터가 주변 지역 지표면 온도를 평균 2도, 최대 9도까지 올리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년간 위성으로 측정한 지표면 온도와 8,400개 이상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지리적 좌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허브로 불리는 브라질 세아라주와 피아우이주에서는 지표면 온도가 2.8도 올랐고 앞으로 5년 안에 0.7도 이상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발전 - 통제하지 못하는 위험

그러나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 반대 시위에서, 그리고 대선 TV 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핵발전을 가능하면 대체해야 할 에너지원으로 언급해 왔다.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회견에서도 핵발전소를 짓는 데 15년이 걸리고 지을 곳도 없다며 부정적으로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올해 1월 26일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2기를 계획대로 짓겠다고 공식화했다. 윤석열의 계획을 물려받겠다는 것이다.

메가프로젝트 발표 전후로는 핵발

전 확대에 속도가 붙었다. 6월 17일 영덕(대형 2기)과 기장(SMR 1기)을 신규 부지로 선정한 데 이어, 6월 29일 국민보고회 보도자료에는 “원전과 SMR을 적극 활용”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같은 날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핵발전소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면서, “시기를 당기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야말로 속도전이다.

지을 땅이 없었던 핵발전소는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호남에도 더 지어질 전망이다. 7월 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은 새 부지를 찾지 않아도 영광 한빛과 울산 새울에 각각 2기씩 더 지을 땅이 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의 재난이 재현될 위험도 균형 있게 배분하겠다는 것일까.

영광에 있는 한빛 1·2호기는 가동 이래 100건이 넘는 고장·사고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황산 191리터 유출 등 사고가 이어졌지만 해당 발전소는 수명 연장 절차를 밟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소가 부족해(이미 85퍼센트를 넘겼다) 부지 안에 건식 저장시설을 짓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발전소가 데운 바닷물은 주변 해수보다 7~9도 높아 굴·김 양식이 피해를 입어 왔다. 2024년 수명 연장 공청회는 전

남·전북 모두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기후 위기를 멈추기 위해 짓는다면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어느새 이 열광장인 데이터센터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보도자료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조기 달성 계획이 담겼지만 “가용가능한 발전원을 모두 활용한다”며 화석연료(LNG) 발전소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총동원은 트럼프가 앞서 보여 준 바 있다. 트럼프는 새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해 7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버지니아주 클로버 석탄발전소는 데이터센터할 전력 수요 증가 속에 폐쇄 시점이 2045년으로 미뤄졌다.

트럼프가 따라잡으려 하는 것은 중국 시진핑 정부의 석탄 활용법이다. 중국의 신규 석탄화력 설비 신청 규모는 2025년 한 해에만 162GW에 달하며, 올해 1분기에도 51GW를 기록했다. 한국에 있는 석탄화력 설비 전체 규모가 39GW 정도다.

에너지 안보를 위한 경쟁이 쉽게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열강의 틈바구니를 뚫고 도약하려 안간힘을 쓰는 이재명 정부의 질주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 비용은 노동계급에 전가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급기야 “비싼”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 주기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도 고려하기로 했다. 집권 1년 만에 뒤집힌 약속들의 상대는 노동자, 서민, 지역 주민, 청년들이다. 지켜진 약속의 상대는 재벌 대기업이다. 이재명식 ‘실용주의’가 누구를 위한 실용인지 보여 준다.

무엇보다 세계적 반도체·AI 경쟁 속에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자본의 축적 조건을 보장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계획은 갈수록 위험천만한 모험으로 치닫고 있다.(관련 기사 2~3면) 노동자 투쟁은 이 질주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장호중